왜 국회도서관 분관은 광주로 와야 하는가

기고

노희용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국회는 국민의 대표인 300명의 국회의원이 모여 일하는 대한민국의 최고 입법기관이다. 국회의원은 국민 주권의 대리인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법과 제도에 반영하고, 국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들은 지역과 정당을 대표해 입법을 제안하고 심의한다. 또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한다. 요컨대 국회의원은 국민의 삶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책임 있는 대리인이다.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관 중 하나가 국회도서관이다. 국회도서관은 단순한 도서의 보관소가 아니라, 입법 활동과 정책 결정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조사·분석·제공하는 기관이다. 동시에 국회도서관은 국민에게도 개방돼 지식정보를 공유하는 공공 플랫폼이다. 즉, 입법과 정책의 이성과 논리가 축적되는 공간이자,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창고다.

이처럼 국회도서관은 '정보의 민주화'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기관이지만, 그 물리적 기반은 여전히 서울에 집중돼 있다. 부산시와 세종시에 분관이 설치됐지만, 호남에는 아직 없다. 이런 상황은 지역 간 정보 접근의 불균형을 초래해왔다. 지식과 정보도 수도권 일극 체제로 편중된 셈이다.

국회가 정보의 평등과 민주성을 추구한다면, 국회도서관의 또 다른 분관은 반드시 광주로 와야 한다. 그 이유는 지리적 여건이나 행정적 조건 때문만이 아니다. 광주는 역사와 정신, 문화와 정체성에 있어 국회도서관이 지향하는 가치와 완벽하게 부합하는 도시다. 무엇보다 광주는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로 위상을 갖추고 있다.

1980년 5월, 광주는 계엄령 철폐와 언론 자유를 요구하며 스스로 광장에 나선 시민들의 도시였다. 시민들은 총칼로 무장한 국가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다. 공동체의 자율과 책임으로 도청을 중심으로 한 자치 질서를 세웠다. 무정부 상태에서 도둑이 없고, 시민들이 쓰레기를 치우며 공동체를 유지했던 일화는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는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민주를, 시민이 주인임을 증명한 도시다.

그뿐만 아니라 광주는 인권의 도시이다. 5·18 이후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수십년간 헌신해 왔다. 이 과정에서 5·18기념재단, 국립5·18민주묘지, 5·18기록관 등이 설립됐고, 이는 인권의 과거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는 교육과 실천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광주는 인권을 기억의 대상으로만 다루지 않는다. 차별과 혐오에 저항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실질적 실천의 거점이 돼 왔다.

나아가 광주는 평화의 도시다. 무력과 폭력의 상처를 경험한 도시임에도, 복수와 증오가 아닌 용서와 화해를 택했다. 시민들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진실을 밝히되, 폭력의 재생산을 거부했다. 이러한 성숙한 대응은 국내는 물론 세계 여러 민주화운동 도시와 연대를 형성했고, 광주는 지금도 미얀마, 홍콩, 팔레스타인 등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에 가장 먼저 응답하는 도시 중 하나다. 평화는 광주의 일상적 태도이자 시민 정신이다.

이러한 민주·인권·평화의 정신은 국회도서관의 설립 철학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국회도서관은 단순한 서고가 아니라, 인간 존엄과 공동체 가치를 지식과 정보로 실현하는 공간이다. 국회도서관의 분관이 광주에 세워진다면, 이는 단순한 물리적 확장이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 가치의 확장이 된다.

광주는 국회도서관 분관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교육·문화 인프라가 풍부하고, 청년과 연구자, 예술가와 활동가 등 다양한 시민층이 지식정보를 적극 활용할 기반을 갖추고 있다. 분관이 접근성 높은 곳에 들어선다면, 이는 지역민에게 열린 지식공간이자 민주주의 학습의 장이 될 것이다. 또한 이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 생산, 아카이빙, 교육 프로그램 등이 활성화되면, 광주 분관은 그 자체로 지역의 문화·지식 생태계를 자극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광주는 국회도서관 분관 설립의 전략적 요충지다. 남부권 전체의 정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허브 기능을 할 수 있다. 광주는 이미 민주, 인권의 상징 도시로서 브랜드가 구축돼 있다. 이 브랜드 위에 국회도서관 분관이라는 구조물을 올리는 것은 국가적 상징과 기능을 동시에 완성하는 일이다. 지금 광주는 과거의 역사를 품은 도시를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국회도서관 분관은 이러한 광주의 정체성과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결정적 인프라다.

국회와 정부는 이제 응답해야 한다. 정보의 민주화를 말한다면, 지식의 지역 균형을 말한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광주에 국회도서관 분관을 설립하는 일이다. 그것은 광주에 대한 예우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자긍심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진일보 @j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서석대

지난달 22일 오전 11시25분께 성묘객의 실화로 경북 의성군에서 산불이 시작됐다. 1주일여간 번진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투입된 경북 상주소방서 소속 소방관 A(40)씨가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호소하며 인근 지역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의성 산불 진화에 투입된 대원이 병원에 이송된 건 처음이다.

최근 국가별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가장 위세 있는 직업으로 국회의원을 꼽았으나 미국·독일은 소방관이 1위를 차지했다.

한국에서 소방관은 15개 직업 중 11위에 그쳤다.

존경받아야 할 직업 소방관

소방관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숭고한 일을 하지만 사회적 지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은 소방관을 안전 총책임자로 여기고 주마다 다르지만 급여 1억원과 위험 수당 2억원을 포함해 평균 3억원의 연봉을 지급한다. 사고현장에서 부상을 당하면 소방전문병원으로 이송돼 전액 무료로 치료받는다.

한국은 소방 장갑과 작업복도 제대로 지급 안 되는, 열악한 근무 환경이 알려지면서 몇 년 사이 처우가 많이 개선됐다. 위험수당 포함 평균 연봉이 6000만~7000만원으로 근로소득자 평균(4214만원) 보다 높다.

한 해 평균 5명이 순직하고 400명이 부상당한다. 최근 10년간 소방관 1만명당 사망자 수는 1.7명으로 미국(1.01명), 일본(0.7명)에 크게 앞선다. 평균 사망연령은 70.6세로 한국인 평균수명(82.7세)에 비해 낮다. 소방전문병원이 아직 없는 것도 아쉽다.

미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소방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다. 미국은 누군가에게 봉사하는 직업을 동경하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자긍심이 커 소방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다.

미국의 경우 "사이렌이 울리면 소방관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말이 있다. 대형 산불을 진압하다 소방관들이 순직하면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전역이 애도한다.

아쉽게도 한국은 소방관의 비극적인 순직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희생정신을 기리며 영웅으로 받들지만 금세 잊어버린다. 119에 들어오는 긴급하지 않은 신고도 소방관의 힘을 빠지게 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이들이 이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 나라가 진정 선진국일 것이다. 소방관의 위험수당을 올리고 소방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이들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제21대 대통령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다양한 분야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조진용 취재2부 기자

社 說

SKT, 회사 명운 걸고 국민 불안 해소해야

대혼란 빠진 '유심' 무상교체

사이버 해킹으로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이 28일부터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에 들어갔다. 지난 18일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부에 공유한 지 무려 열흘만이다. 하지만 이날 가입자들은 물량 부족으로 극심한 '교체 대란'을 겪으며 불안과 혼돈을 겪어야 했다. '혁신적인 기술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SKT의 비전이 부끄럽다.

유심은 이동통신망에서 개인 식별과 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는 '칩'이다. 사용자의 전화번호부터 통신사 가입정보나 인증정보 등이 들어 있어 '내가 누구인지를 통신사에 증명해주는 핵심적 요소'라는 얘기다. 당장 스마트폰은 유심을 통해 통신사에 인증 요청을 보내고 요청을 받은 통신사는 유심 정보를 확인한 뒤 통신망에 접속을 허락한다. 암호화나 인증서 저장, 모바일 결제 등의 보안 기능도 제공한다. 유심이 유출되거나 복제되면, 내 통신 권한과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각종 보안까지 공개되는 셈이다.

그런데도 해킹 사고 이후 SKT의 대응은 석연치 않다. 지난 18일 유심 인증키 등의 유출 가능성이 의심됐지만 SKT가 외부에 해킹 사실을 알린 건 사흘이 지난 21일이다. 가입자에 대한 안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가입자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지난 25일에는 유영상 SKT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전 가입자에게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재고부족으로 적절한 대처도 하지 못했다. 정보 유출의 범위와 규모 등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 사고 이후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지원금을 늘렸다는 것도 어처구니 없다.

정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국민 불편과 불안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에게 결과를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회사의 명운을 건 SKT의 반성과 함께 보안 강화 등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도 필요하다. 28일 유심을 교체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SKT의 미래도 없다.

농산물 수출 악영향 없도록 관세 대응해야

전년비 수출액 39.6% 늘어

전라남도 농수산식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괄목할 성과를 내고 있다. 김, 유자차, 배, 장류 등 대표 품목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으며, 올해 1분기 미국 수출액만 3744만 달러에 달했다. 전남 전체 농수산식품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한 1억 7916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김은 단일 품목으로 9540만 달러 수출을 달성했고, 신선 농산물과 과일, 음료 수출도 크게 늘었다. 하지만 수출 전선에 불안감도 감돈다. 미국이 한국산 농수산품에 25% 추가 관세를 예고하면서 현장에는 긴장감이 확산하고 있다. 현재는 90일간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관세 부과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면 소비자 이탈과 수출 둔화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수년간 공들여 개척한 미국 시장을 지키기 위해 농가와 업체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특히 김이나 과일 음료처럼 미국 소비자층을 겨냥해 수출을 확대해온 품목은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수출직불금 37억5000만원을 편성해 250개 수출업체를 지원하고, 해외 판매장 판촉행사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적인 수출 기반 강화와 시장 다변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일본, 동남아, 유럽 등 다양한 시장을 겨냥한 맞춤형 진출 전략과 함께, 고부가가치 품목 육성, 물류비 절감, 품질 인증 강화 등 수출 경쟁력 제고도 병행해야 한다. 정부 차원의 대응도 절실하다. 관세 부과 움직임에 맞서 통상 협상을 강화하고, 필요시 국제기구 제소 등 다각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농가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관세 대응 컨설팅, 긴급 금융 지원, 해외 판로 개척 지원 등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 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남 농수산물은 세계 무대에서 분명히 빛나고 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대외 변수 앞에서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이다. 전남도와 정부는 관세 파고를 넘어설 수 있도록 수출 전략을 구체화하고, 농가와 수출업체가 신뢰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www.jnilbo.com m.jnilbo.com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